

12.28 위안부 합의'와 한일관계(2016. 7.31)

오태규/한겨레 논설위원실장

<12·28 합의의 의미>

-2011 년 12 월 이명박-노다 정상회담 파탄 이후 몇 년 간의 한·일 간의 갈등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였음.

-따라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를 타결 지은 '12·28 합의'는 한국 안의 다양한 평가에 관계없이 공식적인 한-일 관계 전환의 중대 기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즉, 최근의 한-일 관계가 12·28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12·28 합의의 내용과 평가>

-주요 내용은 다 알다시피,

@일본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한국 정부가 만드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 억엔을 정부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위의 합의 내용과 함께 부수적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한국정부가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합의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을 요소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및 반성 표명, 10 억엔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의 3 종으로 된 합의의 뼈대는 한국이 그동안 즐기치게 제기해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라는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제시되었던 일본의 공식 제안(2012.3 월의 사사에 안)보다 일부 발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05 년 ‘위안부,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는 1965 년 한-일협정에서 미해결된 과제’라고 한 공식 입장, 2010 년 현재의 부작위 위헌 판결과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임.

-따라서 타결의 발전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 논리 변화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일본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도 위안부 문제는 1965 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타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음.

-이런 점이 일본에서는 대체로 12·28 합의에 만족을 표시하는 여론이 많은 반면, 한국에선 위안부 지원단체, 학계 등 지식인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합의의 본체가 아니라, 부속서라고도 할 수 있는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의 비난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서 나오고 있음.

-일단 일본 쪽에서 나오는 소녀상 철거와 10 억엔의 예산 출연 연계설의 진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한국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실제로 예산 출연 문제와 연결되어 진행될 경우 합의 자체까지 파기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봄.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자제도 일본 쪽이 적극적으로 ‘협정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반면에,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해왔던 위안부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사업과 국제홍보를 자제하는 소극적이 자세를 보임.(예:박근혜 대통령의 2016 년 삼일절 기념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3 월 2 일 제네바 유엔 인권위 참석, 위안부 언급 자제) 이것이 국내 비판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 중 ‘불가역적’은 외교 협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라는 점에서 지식사회에서 ‘모욕적’이라는 평가가 많음. 불가역적이란 용어는 북핵 협상에서 미국 쪽이 북한에 대해 요구했던 용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또 이번 합의는 한-일 사이의 역사 갈등과 국제사회와 일본의 갈등을 한국 국내 갈등으로 축소하는 의미가 있음.

-역사 갈등이 단 번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간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함.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모든 한일관계의 입구로 높게 설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임.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압박 등을 초래해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합의로 귀결되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봄.

@위안부 합의의 이행

-정부 차원에서는 위안부 합의를 기점으로 대일관계를 갈등에서 협조로 방향을 틀었으므로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러나 앞서서도 봤듯이 합의 내용의 취약성, 6 월 28 일 재단 출범 때 일어난 반발 등으로 미뤄볼 때 합의 이행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소녀상 철거와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의 연계가 드러나고, 일본에서 자기중심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해석이 돌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일 사이의 대비되는 위안부 관련 활동이 부각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 간의 갈등·대립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또 이것이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총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쟁점화할지도 주목할 만한 관점 포인트임